

# 사회불안요소와 중국의 성장체제 전환

---

2010.2.21 | 김수현\_새사연 연구원 | sida7@saesayon.org

---

## 목 차

1. 급속한 경제성장 아래 증대된 사회불안요소
2. 중국 경제성장의 이면
3. 내수중심 성장체제로의 전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4. 글을 마치며



---

<http://saesayon.org>

## 요약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종이호랑이”라 불리던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2010년 현재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5조 8,800억 달러로 일본(5조 4700억 달러)을 추월해 미국(14조 6,600억 달러) 다음으로 높다. 중국을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 꼽도록 만드는 것은 경제성장률인데 1990년 4,045억 달러이던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이후 연평균 10%의 경제성장률이 지속된 결과 20년도 되지 않아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중국은 경제성장에 있어서는 고공행진이 이어졌지만 국민들 사이에는 여러 불만들이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등 사회불안요소들이 증대되었다. 지난 2010년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자살과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이 급증한 해로 파업의 경우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또한 도시와 농촌간, 계층간 소득격차의 확대에 의한 사회불안정성 역시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중국의 발전 및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이다.

이와 같은 사회불안요소들이 증가한 이유는 현재 “세계의 공장”이라고도 명명되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수출중심 경제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은 국유기업을 통한 자본집약적 대형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을 꾀했다. 그리고 제조업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시켜 투자에서 수출로, 수출에서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경제순환 구조를 형성하였는데, 이러한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는 연평균 10% 이상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수출중심 경제성장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반했는데, 그 중 하나가 민간소비지출의 비중 축소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총지출 비중에서 민간소비지출 비중은 급격히 감소해 2004년부터는 30%대로 떨어졌다. 이와 같은 민간소비지출 비중의 감소는 우선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위해 1990년대 중반 이후 최저임금을 억제시켜 임금상승 수준을 낮게 유지하려는 노력과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인한 실업증가로 인해 가계의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가계소득의 감소는 지출의 감소로 이어져 민간소비지출 감소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역시 민간소비지출 감소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China Health and Nutrition Survey(CHNS)를 이용해 중국의 소득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수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상대적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성향이 낮은 소득상위층의 소득은 증가하고, 소비성향이 높은 소득하위층의 소득은 감소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전체 가계지출수준은 상대적으로 감소해 민간소비지출의 비중을 하락시킬 수 있다.

과업 등 노사분규와 함께 이러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심각한 사회불안요소이다. 분석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와 함께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임금근로자가 집중된 도시의 경우 그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직면한 임금근로자들, 점점 더 벌어지는 도농간 격차, 그리고 가진 사람이 더욱 많이 가지는 소득분배에 있어서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중국경제성장의 이면에 있는 심각한 사회불안요소인 것이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증가한 이와 같은 사회불안요소들은 최근 대외적 요인과 결합해 중국에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2008년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여파는 기존 중국제조업 수출상품의 주요 수요자였던 선진국들의 국내총생산과 총지출을 일제히 하락시켰고, 이는 제조업 상품에 대한 구매력 약화로 이어져 중국의 수출주도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 역시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안화가 평가절상 될 경우 중국의 제조업 상품의 해외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중심 제조업 부문에서의 과잉투자 문제가 점점 부각되는 속에서 이러한 요인들은 기존 수출중심 전략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기존 경제성장방식의 수정이 요구되는 가운데 중국 지도부는 개혁, 개방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증가가 사회적 안정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내수중심의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지역간 소득불평등의 해소와 소비진작에 역점을 둔 내수부양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보험, 연금제도 등 사회복지제도 수립을 위한 개혁을 추진과 같은 분배정책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전략들의 실시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2차 5개년 계획에 담고 있

는 “포용적 성장”의 내용은 사회불안요소를 해결하고 내수중심의 새로운 경제구조를 통해 성장을 구가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러한 내수중심의 성장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불안요소들을 제거함과 동시에 기존의 수출중심 경제구조에서 누리던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들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내수중심의 성장전략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공적지출의 증대와 농촌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위험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함과 동시에 민간소비지출의 증가를 가져와 내수중심 경제성장 전략의 기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임금상승 역시 노사분규를 줄이고 도시노동자들의 소비를 증가시켜 마찬가지로 민간소비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의 해소를 위한 소득하위층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의 소득을 상승시킴으로써 전체 민간소비지출의 증대를 가져와 내수중심의 성장전략의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의 정책 전환이 성공으로 끝날 것인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확대가 필요하고 서부지역의 도시화 역시 요원한 것이 사실이며, 정부 주도의 투자 증가로 인한 만성적 과잉투자과 신용버블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들은 내수주도 균형발전전략으로 성공적으로 전환될 가능성 또한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간소비자의 지출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 증가 등이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의 성공여부 판단은 더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확실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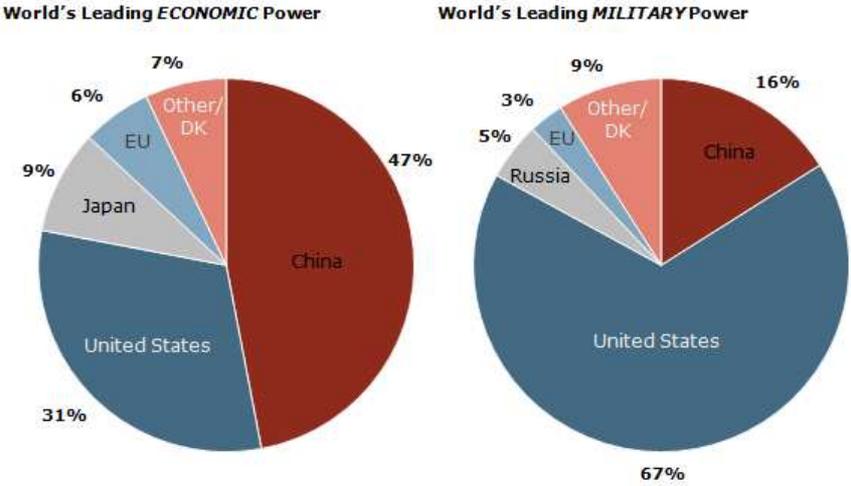
하지만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이 성공하던 실패하던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 경제는 이러한 중국의 정책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대중(對中)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중국을 대비한 대중(對中) 정치전략과 함께 소비중심으로 변모할 중국 경제성장 전략에 알맞은 대중(對中) 경제전략을 수립하여 세계경제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본문

1. 급속한 경제성장 아래 증대된 사회불안요소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이호랑이”라 불리던 중국이 이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대표 Andrew Kohut의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에서 9일 사이 미국의 성인 1,5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세계최고의 경제대국(world's leading economic power)으로 중국을 꼽은 사람이 절반에 가까운 47%나 되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반면 미국을 꼽은 사람은 31%였다. 3년 전 같은 조사에서는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미국을 꼽은 사람이 41%로 가장 많았고, 중국을 선택한 사람은 30%였다.

[그림 1]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설문 응답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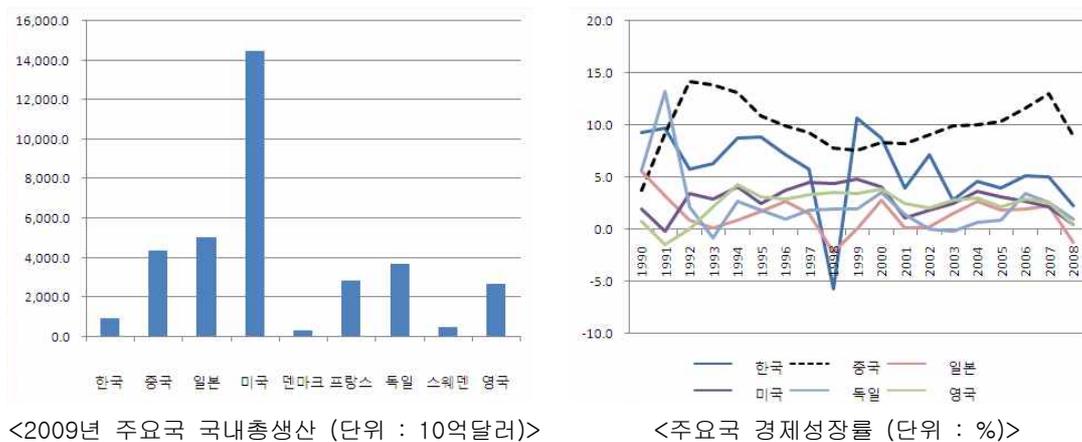


출처 : 퓨리서치센터 홈페이지(<http://pewresearch.org/>)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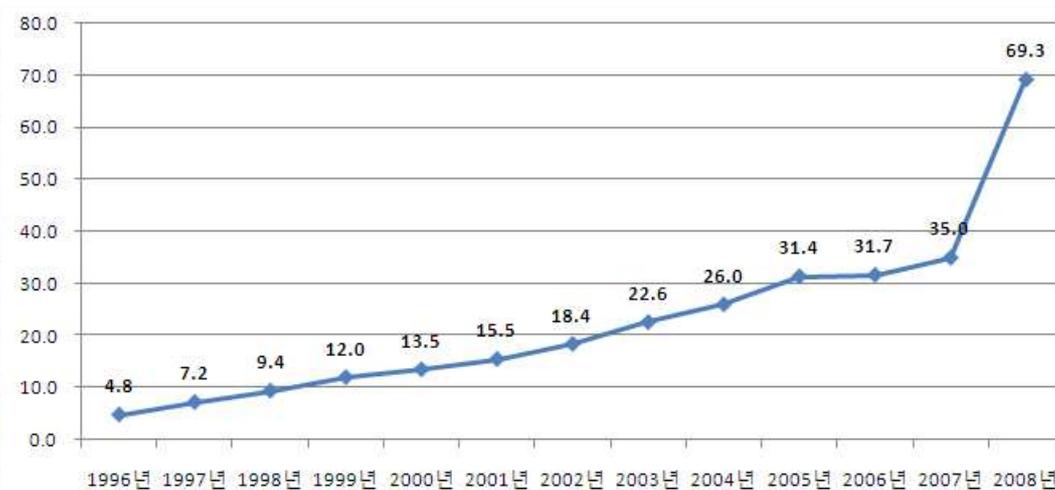
이런 중국에 대한 인식변화는 달라진 중국의 위상을 반영한다. 5년 전과는 달리 국빈대우를 받으며 미국을 방문하는 후진타오 주석의 모습, 그리고 중국의 동의없이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는 G20을 비롯한 여러 국제회의의 모습들은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의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기인한다. 2010년 현재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5조 8,800억 달러로 일본(5조 4700억 달러)을 추월해 미국(14조 6,600억 달러) 다음으로 높다. 하지만 중국을 제1의 경제대국으로 꼽는 이유는 다른 선진국

들보다 월등히 높은 경제성장률 때문이다. 1990년 4,045억 달러이던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이후 연평균 10%의 (실질)경제성장률이 지속된 결과 20년도 되지 않아 10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그림 2] 참조).

[그림 2] 중국의 국내총생산과 경제성장률



[그림 3] 중국의 노사분규 발생건수



출처 : 중국 국가통계국(2009) 중국노동통계연감. 임정명·손민중·권혁재(2010) 재인용

그러나 성장에 있어서는 고공행진이 이어졌지만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러 불만들이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등 사회불안요소들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에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자살과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 등이 급증하였는데, 파업의 경우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 IT제품의 하청공장인 대만계 폭스콘(Foxconn)에서는 노동자들의 자살이 연이어 발생했으며, 혼다자동차

부품공장, 토요다자동차 부품공장, 현대자동차 하청회사, 월마트 등 중국 내 외자회사들에서는 노동환경 개선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이 줄을 이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노사분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그림 3] 참조), 전국규모의 파업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의 발표에도 많은 학자들은 임금인상을 목적으로 한 이와 같은 파업들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사분규만이 아니다. 최근 중국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간, 계층간 소득격차의 확대에 의한 사회불안정성 역시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여경훈, 2011; 이은경, 2011; 엄정명·손민중·권혁재, 2010). 중국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중국의 가장 부유한 상위 20%의 소득은 가장 빈곤한 하위 20%의 소득보다 17배나 높다고 한다<sup>1)</sup>. 또한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역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0년 농촌소득의 2.79배이던 도시의 소득이 2009년에는 3.31배로 확대되어 실질적인 도농소득격차는 4~6배로 증대되었고<sup>2)</sup>, 도농간 소비나 생활수준에 있어서의 격차도 크게 증가하였다.

## 2. 중국 경제성장의 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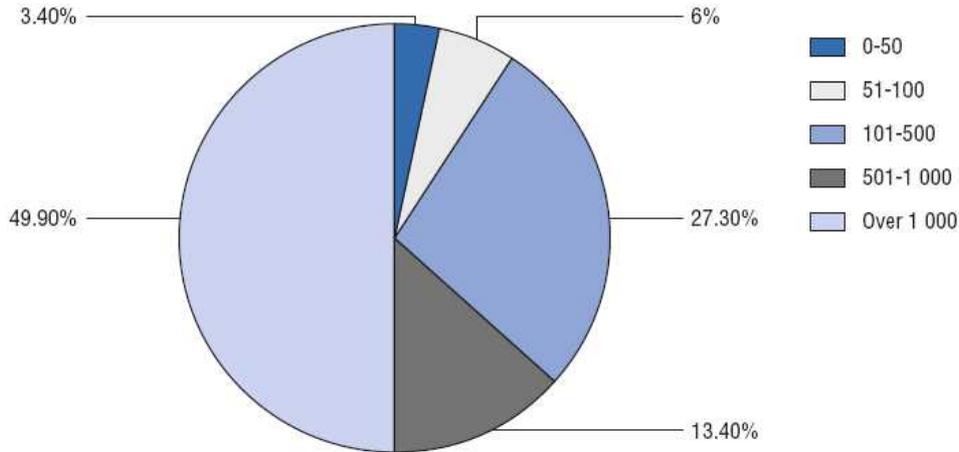
이와 같은 사회불안요소들이 증가한 이유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중국의 경제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세계의 공장”이라고도 명명되는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수출 주도적 경제구조가 이끌어 왔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었던 중국경제는 1990년대 후반 ‘조대방소(抓大放小)’ 정책 통해 국유기업을 대형화하는 정책기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자본집약적 국유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 후 자본집약적 대형 중화학공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늘어나, 2005년에는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70%를 넘어섰고 경공업의 비중은 30% 이하로 낮아졌다. 그리고 국가전체의 부가가치생산에 있어 500인 이상의 종업원이 종사하는 대기업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그림 4] 참조).

1) 기욤 뒤발 (2011) 용의 비상을 위한 조건, Economy insight, 2011년 1월 판

2) 중국사회과학원 (2009) 2009년 중국도시발전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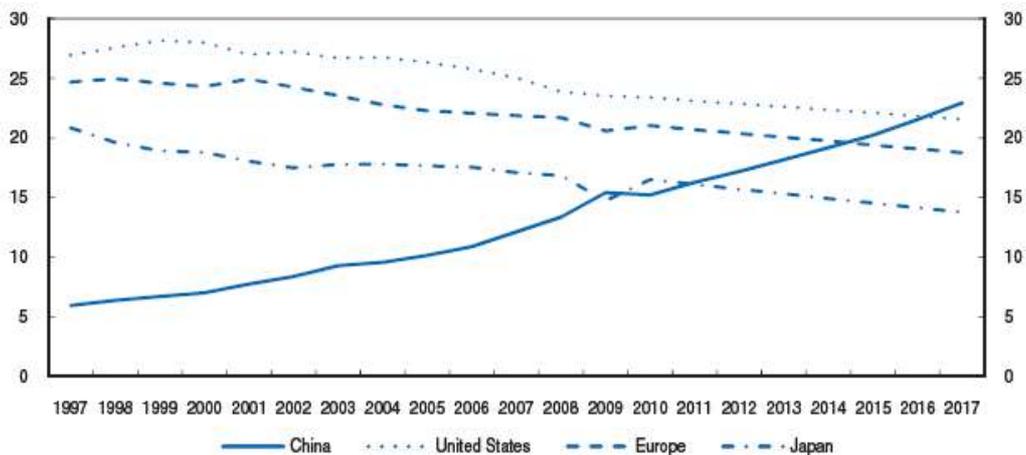
[그림 4] 기업규모에 따른 부가가치생산 비중 (2005년)



출처 : OECD (2010a) SMEs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이와 같은 국유기업을 통한 대형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조정은 제조업에서의 국가경쟁력을 제고시켜 투자에서 수출로, 수출에서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경제순환 구조를 형성하였는데, 1990년대 이 후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국가경쟁력이 약한 선진국들에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이런 중국의 빠른 수출증가를 견인하였고(엄정명·손민중·권혁재, 2010),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급속한 수출증가는 지금과 같은 연평균 10% 이상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었다. 이와 같은 제조업에서의 성장이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게 만들었으며, 지금과 같은 제조업에서의 부가가치 생산이 지속된다면 OECD(2010)는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이 세계 제조업 생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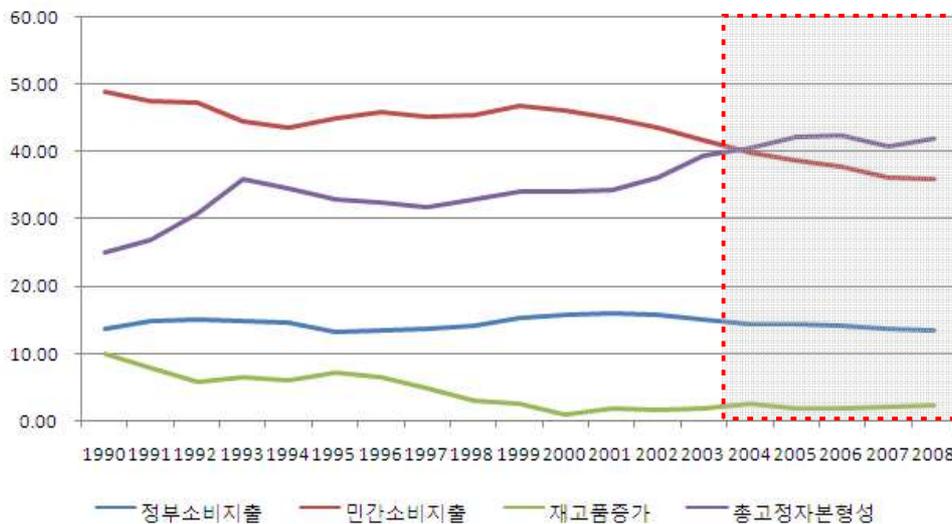
[그림 5]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에서 중국과 주요 선진국의 비중 (단위 : %)



출처 : OECD (2010) OECD Economic Surveys: China

하지만 이런 중국의 수출중심의 경제성장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반했는데, 그 중 하나가 민간소비지출의 비중을 축소시킨 것이다. 1980년대 국내총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민간소비 비중은 1990년대 40%대로 떨어졌고, 이 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와 수출 주도 성장모형’이 급속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된 2000년대에 들어서 30%대로 하락했다. 특히, 2004년을 기점으로 민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아래로 떨어진 반면, 총고정자본형성의 비중이 그것을 넘어서면서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구성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그림 6] 참조).

[그림 6] 중국의 국내총지출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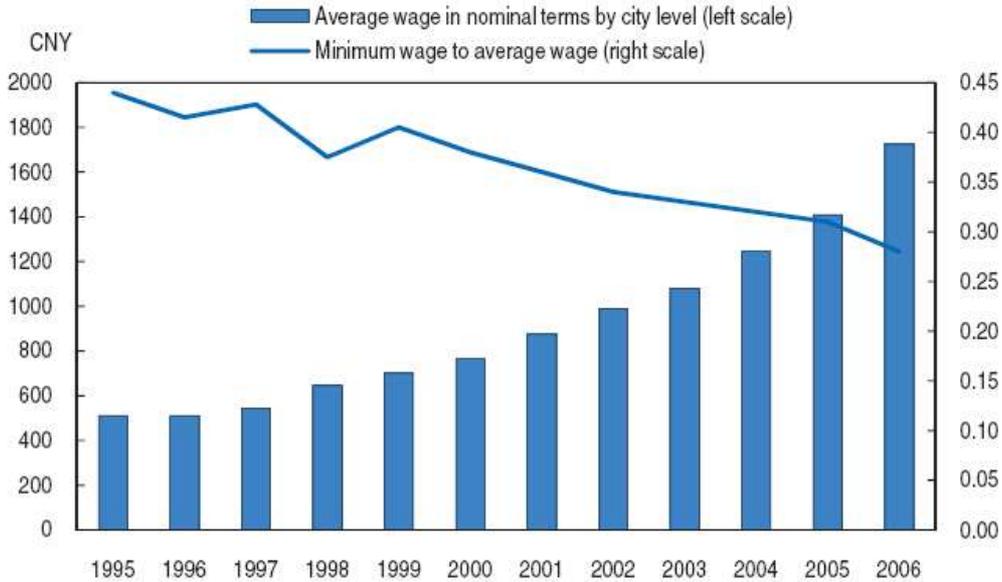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

이처럼 국내총지출의 구성에서 민간소비지출 비중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위해 1990년대 중반 이후 임금상승을 억제하면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다(여경훈, 2011).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인해 명목 임금이 상승하였으나 중국정부는 최저임금을 그것에 상응해 상승시키지 않았다. 그 결과 도시평균명목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수준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수하는 추세를 보였다([그림 7] 참조). 그리고 중국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유기업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실업이 증가하게 되었으며([그림 8] 참조), 고용불안정성이 증가되었다.

이러한 실업과 임금억제로 인한 상대적 가계 소득수준의 하락은 가계 소비지출을 감소시켰고, 이것이 국내총지출에서 민간소비지출 비중의 감소로 이어져 결국 민간

소비지출의 비중이 투자보다 작아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민간소비지출 비중의 감소의 원인이 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임금과 노동환경, 실업, 고용불안정성 등은 중국노동자들의 불만을 상승시켜 이들로 하여금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파업과 같은 형태로 불만을 분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7] 중국의 도시평균임금 및 평균임금대비 최저임금수준



출처 : OECD (2010) OECD Economic Surveys: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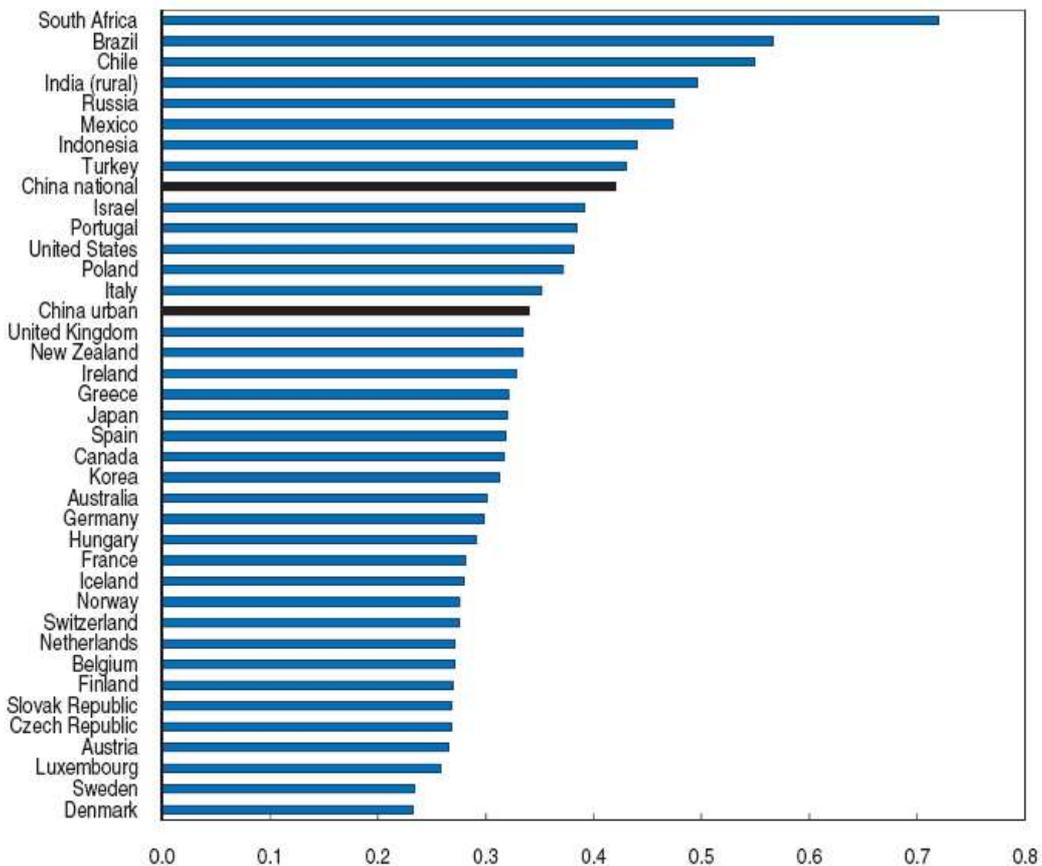
[그림 8] 중국의 실업률



출처 : ILO 홈페이지 통계자료

민간소비지출 비중 감소를 가져온 또 하나의 원인은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이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중산층이 줄어들어 소득상위층과 하위층으로의 집락화가 더욱 진행되고 두 계층 간 사이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은 더욱 높은 소득을 얻게 되고 소득이 낮은 계층의 소득은 낮아지면서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은 낮은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처분소득대비 소비성향이 낮은데, 사회보장서비스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중국의 경우 이러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의 총량을 감소시켰고, 이로 인해 국민총지출에서 민간소비지출의 비중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여경훈, 2010). 그리고 이러한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 역시 현재 중국의 사회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9] 주요국가의 소득불평등도 비교 (2000년대 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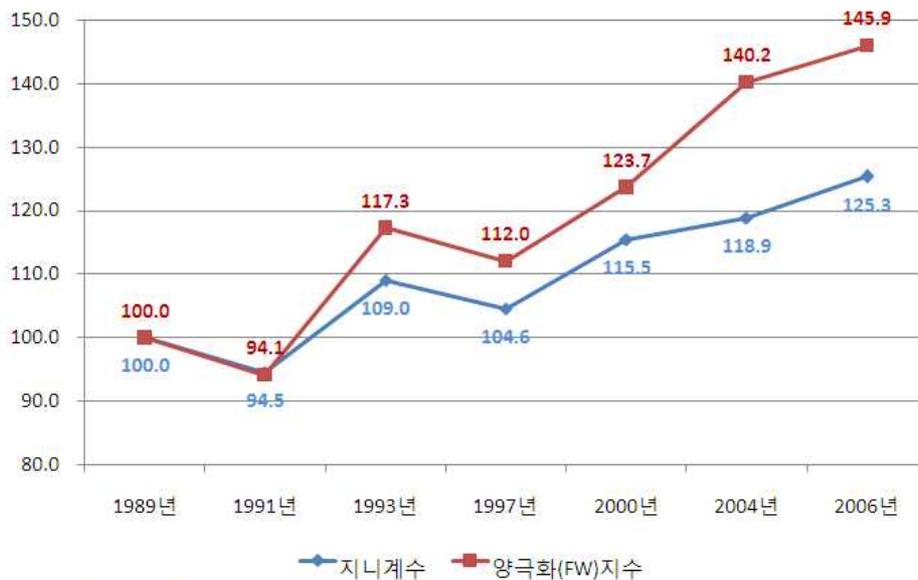
출처 : OECD (2010) OECD Economic Surveys: China

지니계수를 통해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한 OECD의 통계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중국의 지니계수는 0.5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불평등은 유럽의 선진국들보다

는 높지만 멕시코나 터키보다는 낮았다고 볼 수 있다([그림 9] 참조). 하지만 최근 중국사회과학원의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중국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상위 20%의 소득이 가장 빈곤한 하위 20%의 소득보다 17배나 높다는 결과가 그것으로 이는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꼽히는 브라질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국의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의 심화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Nichols(2010)가 이용한 China Health and Nutrition Survey(CHNS)를 통해 직접 분석한 결과 [그림 10]을 얻을 수 있었다<sup>3)</sup>. 이는 CHNS가 제공하는 자료 중 각 연도의 가구소득을 이용해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를 분석한 결과로, 소득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의 수준을 각각 지니계수와 FW 양극화지수(Foster and Wolfson, 1992)를 통해 구한 후 1989년을 100으로 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sup>4)</sup>.

[그림 10] 중국의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



이에 따르면 2006년의 소득불평등도는 1989년에 비해 25.3% 악화되었고, 소득양극화는 46% 정도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1989년에서 2006년 사이 중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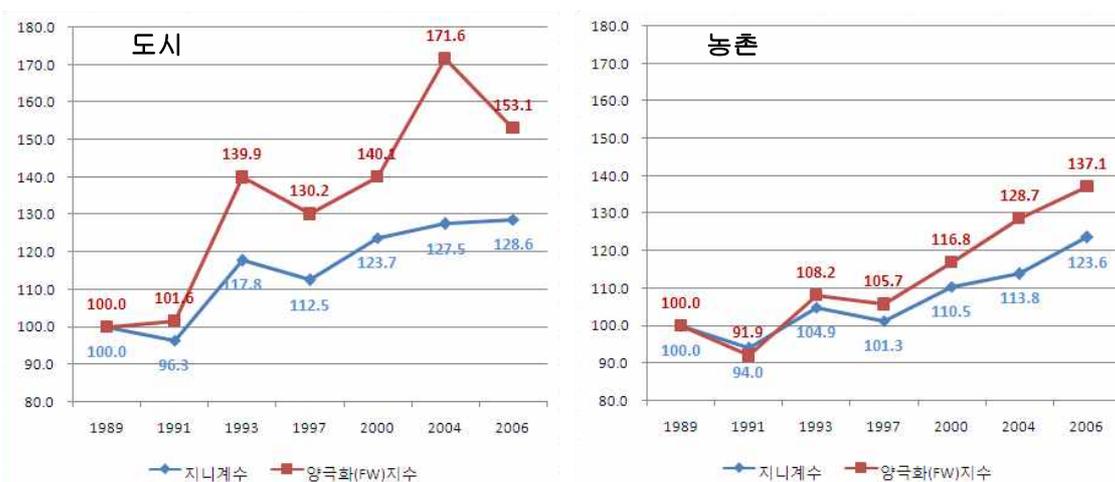
3) China Health and Nutrition Survey(CHNS)의 경우 조사지역이 제한되어 있고 가구 표본의 수도 크지 않기 때문에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얻을 수는 없다. 원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구 표본수는 1989년 3,791개, 1991년 3,607개, 1993년 3,428개, 1997년 3,838개, 2000년 4,329개, 2004년 4,339개, 2006년 4,374개이다. CHNS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Nichols(2010)를 참조

4) 지니계수와 소득양극화지수에 대해서는 “김수현 (2010) 소득양극화의 개념 및 양극화 실태” 참조

보인 이와 같은 급속한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의 심화는 자료가 가지는 한계로 인해 정확한 수치로서의 의미는 가지지 못하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진행되었음을 가리킨다.

또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모두에서 지니계수와 FW양극화지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된 것을 의미한다([그림 11] 참조). 특히 임금근로자들이 많은 도시지역의 지니계수와 FW 양극화지수는 각각 28.6%, 53.1%나 증가하여 23.6%, 37.1%의 증가를 보인 농촌 지역보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 성장으로 고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증가한 반면 신자유주적 고용정책으로 인한 실업의 확산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억제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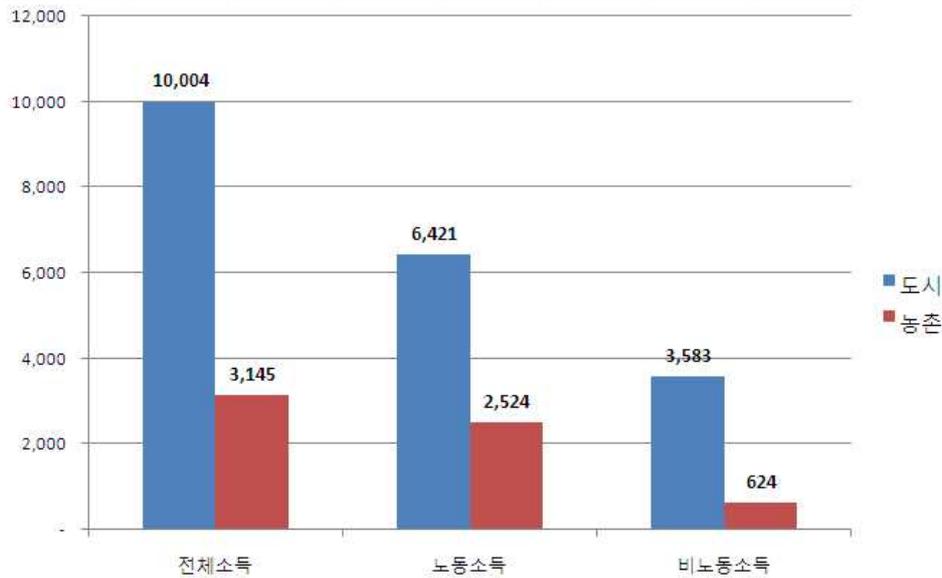
[그림 11] 도시와 농촌의 소득불평등 및 소득양극화



이와 같은 중국의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의 심화는 심각한 사회불안요소이다. 이는 특정 계층으로의 소득집중으로 인해 소득상위층과 하위층 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소득계층 간 이동의 가능성이 점점 봉쇄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소득집단 사이의 잠재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나아가서는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Gustafsson and Sai(2009)나 OECD(2010) 등의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는 농촌사회의 불만을 야기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며([그림 12] 참조), 도시지역의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의 심화는 도시 임금근로자들 내에서도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 사이의 갈등을 증대시킬 것이다. 이미 저임금 도시 임금근로자들은 앞서 이야기한 파업 형태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림 12] 도농간 연평균 소득 격차 (단위 : 위안)



출처 : OECD (2010) OECD Economic Surveys: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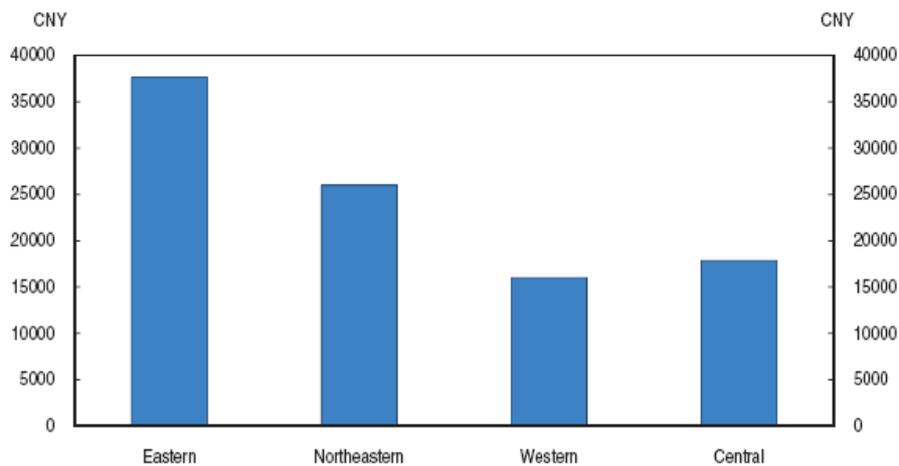
### 3. 내수중심 성장체제로의 전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증가한 이와 같은 사회불안요소들은 최근 대외적 요인과 결합해 중국에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2008년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여파는 기존 중국제조업 수출상품의 주요 수요자였던 유럽 등 선진국의 국내총생산과 총지출을 일제히 하락시켰고, 이는 제조업 상품에 대한 구매력 약화로 이어져 중국의 수출주도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 역시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안화가 평가절상 될 경우 중국의 제조업 상품의 해외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중심 제조업 부문에서의 과잉투자 문제가 점점 부각되는 속에서 이러한 요인들은 기존 수출중심 전략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여경훈, 2010).

기존 경제성장방식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는 가운데 중국 지도부는 개혁·개방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증가가 사회적 안정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2004년 말

‘조화사회 건설’과 ‘균형발전’이란 새로운 경제발전 모토의 채택과 함께 내수중심의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여경훈, 2011). 2008년 11월 발전이 더딘 서부지역에 대한 사회 인프라 투자와 농촌의 소득 증가 및 소비진작에 역점을 둔 총 4조 위안 규모의 내수부양정책을 실시였으며, 최근에는 의료보험 등 사회복지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등 분배정책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전략들을 최근 실시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뒤발, 2011; 이은경, 2011).

[그림 13] 중국의 지역별 1인당 GDP



출처 : OECD (2010) OECD Economic Surveys: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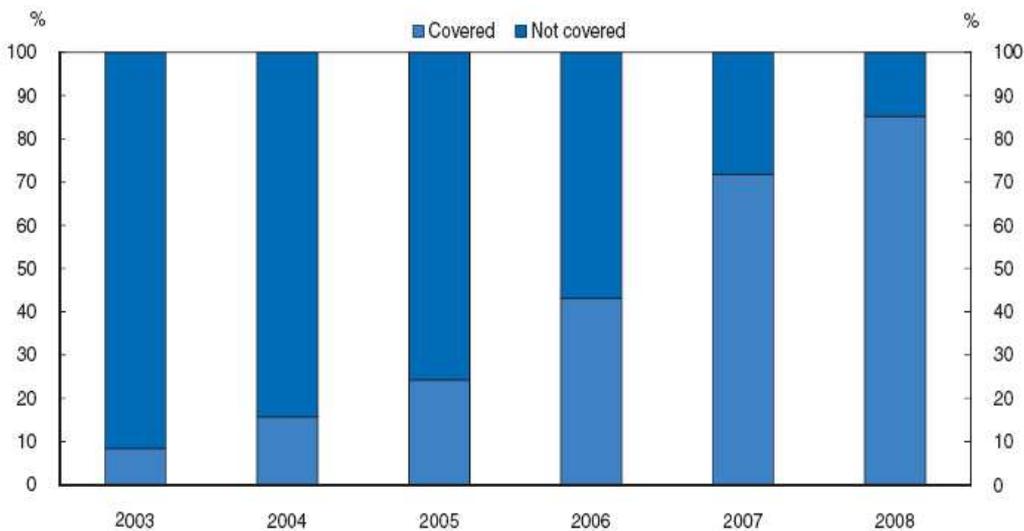
성장전략 전환에 대한 중국의 의지가 더욱 잘 드러나는 것이 12차 5개년 계획(12·5규획)이다. 중국정부는 2010년 10월 ‘포용적 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12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2011년에서 2016년 사이 실시 예정인 경제발전계획으로 내수확대, 안정적 경제발전, 소득분배 조정 등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엄정명·손민중·권혁재, 2010). 이러한 12·5규획의 발표는 중국 지도부의 성장방식 전환을 의미한다. 발표가 있는 후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는 공식석상에서 차례로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수출중심의 기존 경제성장 방식에서 민간소비와 복지가 강조된 내수중심의 방식으로의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러한 내수중심의 성장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불안요소들을 제거함과 동시에 기존의 수출중심 경제구조에서 누리던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일단은 이와 같은 중국의 성장방식 전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들이 우세하다. 향후 중국이 직면할 수 있는 위기와 관련해 많은 학자들은 외부적 요인이 아닌 내부적 갈등에 더 초점을 맞추어왔다. 사회주의 국가답지 않은 낮은 공공지출과 사회복지 수준이 사회불안의 원인이 될 것이란 것이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러한 주장들은 더욱 중요해졌으며, 도농간, 계층간 빈부격차는 중국 지도부에도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내수중심의 성장전략 추진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공적지출의 증대와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 등의 정책들을 통해 이러한 위협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중국의 사회보장서비스 지출수준은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새로운 내수중심의 성장전략의 도입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중국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서비스를 개선시켜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완화시킬 것이다.

[그림 14] 중국의 의료보험 적용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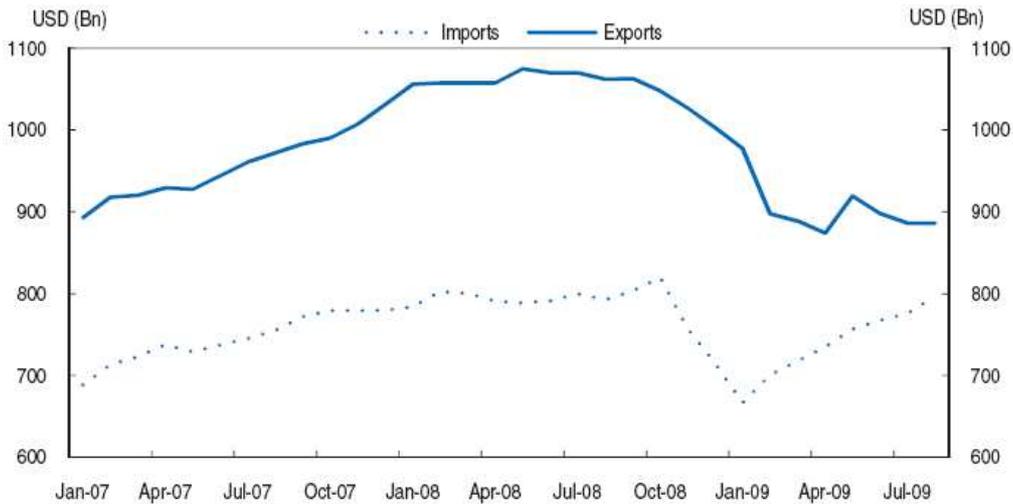
출처 : OECD (2010) OECD Economic Surveys: China

이러한 노력은 현재도 추진 중에 있다. 중국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의료보험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상당수준의 개선을 이루었으며([그림 14] 참조), 2009년에는 기본의료보장제도와 기본약품제도 구축, 최하층 의료서비스 시스템 완비 등과 함께 의료보험가입률 90%를 목표로 하는 의약보건시스템개혁 중점 실시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8,500억 위안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자

를 위한 연금을 확대하고, 연금제도가 없는 농촌거주자를 위한 연금제도를 마련하는 등 국민들의 불만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 새로운 성장전략에서의 이러한 공공부문의 투자는 기존에 문제시되었던 사회불안요소를 완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사회보장체제 완비 정책은 12·5규획에 함께 명시된 도시농촌 주민의 수입 증대, 취업 촉진 정책과 함께 민간소비지출의 증가를 가져와 내수중심 경제성장 전략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임금상승은 노사분규를 줄이는 동시에 도시노동자들의 소비를 증가시킬 것이며, 농촌지역 사람들의 소득 상승 역시 소비를 증가시켜 전체 민간소비지출을 증대시킬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증대는 의료, 교육, 노후보장 등을 위한 저축을 줄일 수 있게 해 민간소비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며, 취업의 증대는 소득향상과 함께 실업의 위험을 줄임으로서 실업을 대비한 예비적 저축을 소비로 전환시켜 민간소비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득하위층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의 소득을 상승시킴으로써 전체 민간소비지출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그림 15] 금융위기 상황에서의 중국의 수출입 변화 (단위 : 10억달러)



출처 : OECD (2010) OECD Economic Surveys: China

이러한 민간소비지출의 증대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기존의 수출중심 경제성장을 대신하는 내수중심의 경제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다. 민간소비 증대는 내수시장의 개선을 가져와 기존의 투자-수출-투자로 이어졌던 성장방식을 투자-소비-투자의 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투자가 소비로, 소비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내수중심의 성장방식은 기존의 대외적 불안요소가 중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불안요소를 개선시켜 향후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해외의 제조업 상품수요가 줄어들어 수출이 감소하자 중국은 공공지출을 통한 내수진작으로 9%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어나오면서 내수중심의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보인 바 있다.

#### 4. 글을 마치며

급속한 성장 속에 만연했던 사회불안요소는 금융위기로 인한 최근의 대외적 요인과 함께 중국 지도부로 하여금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에 중국 지도부는 기존의 수출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에서 복지와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내수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의 목표는 사회불안요소들을 제거하고 성장을 지속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정책 전환이 성공으로 끝이 날 것인가는 아직은 두고 볼 일이다.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확대가 필요하고 서부지역의 도시화 역시 요원한 것이 사실이며, 정부 주도의 투자 증가로 인한 만성적 과잉투자와 신용버블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들은 내수주도 균형발전전략으로 성공적으로 전환될 가능성 또한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간소비자의 지출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 증가 등이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여경훈, 2011). 그러나 그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더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정책은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해결이라는 목적과 부합한다 볼 수 있다. 12·5규획으로 구체화된 내수중심의 성장정책은 기존 수출중심의 성장전략이 직면하고 있는 대외적 문제점들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성장속에서 심화되었던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 도농 간 계층 간 격차 등으로 인한 사회불안문제 또한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존 수출중심의 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복지와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주도 성장전략은 몇몇 정책에서 실패가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뒤발(2010)은 중국을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중국이 수출 의존도가 낮은 경제모델로 전환하는 저력을 보여줄 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그러한 중국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성공하던 실패하던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 경제는 이러한 중국의 정책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대중(對中)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중국을 대비한 대중(對中) 정치전략과 함께 소비중심으로 변모할 중국 경제성장 전략에 알맞은 대중(對中) 경제전략을 수립하여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으로 야기될 세계경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엄정명·손민중·권혁재 (2010)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 투자-수출에서 소비주도로」,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여경훈 (2011) 「‘중국효과’의 정책 시사점」, 새사연 보고서.
- 이은경 (2011) 「중국의 사회갈등과 사회보장시스템」, 새사연 보고서
- 기욤 뒤발(Guillaume Duval) (2011) 「용의 비상을 위한 조건」, Economy Insight, 2011년 1월판.
- Gustafsson, B. and Sai, D. (2009) 'Rank, income and income inequality in urban China', *China Economic Review*, 20:497-507.
- Nichols, A. (2010) 'Income inequality, volatility, and mobility risk in China and the US', *China Economic Review*, 21:S3-S11.
- OECD (2010) *OECD Economic Surveys: China*, OECD.
- OECD (2010a) *SMEs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OECD.